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5/ 24 통권 1624호

##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위장전입, 중도실용의 인사관행(?)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요건과 적용방법

##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금융소득은 비교과세 방법에 의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

## C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취득자에게 추가하락차액 부담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p.13)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정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과와 稅計·經營戰略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요건과 적용방법〉

개념, 구분	조특법 등의 해당내용	관련 법 규정
기본 정의	24년까지 청년이 중소기업 창업하면, 5년간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밖에는 100%, 과밀억제권역 내의 창업이면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중소기업(세법상 중소기업 : 제조, 광업, 물류산업 등,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기술성 서비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유튜버 등	1인미디어 사업인 경우,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업)으로 사업자 등록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3.3% 부가세 면제 사업소득, 인적용역이면 중소기업 해당 안됨	사업자등록
제외업종	번호사와 법조관련직, 공인회계사, 세무사, 행정사, 건축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청년범위	창업 당시 15세~34세 이하 청년(동업이면 청년이 50% 초과, 법인이면 청년이 최대주주 해당, 50:50은 안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창업개념	새로운 창조, 창설,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한 경우 (기존사업 설립된 후 인수·취득은 안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 아님	· 합병·분할, 현물출자, 사업포괄양수도, 중전사업 자산인수·매입하여 계속 · 기존 개인 사업의 법인전환, 부모나 본인 폐업 후 동일종류 사업 개시, 사업확장·업무추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소득구분	창업이익에 대해 청년소득(50% 초과)만 감면 인정, 청년소득 이외는 감면 제외	소득계산 원칙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24호 / 주간 21호

2023. 05. 24.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문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예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요건과 적용방법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매출채권 등 대손사유(법령 §19의2①)	2
C E O 에 세 이	위장전입, 중도실용의 인사관행(?)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퇴직급여 손금산입 관련 -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이혼한 친모 및 계모의 부양가족공제 대 상 여부 문의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차량 렌탈관련 회계처리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금융소득은 비교과세 방법에 의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일자리 창출 조세감면 내용	10 11
직 장 인 Survival	직장인 영어회화 공부법 여섯번째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법규재산-172, 2022.04.13) -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후사, 사 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후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 는 것이며, 사업자가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사전법규부가-1399, 2022.11.29)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취득자에게 추가하락차액 부담시 증여세 과세대 상임	13
세 무 정 보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16 26 32
회 계 정 보	-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	33 40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8

# 매출채권 등 대손사유 (법령 §19의2①)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컨설팅  
(Deal business)  
(829-7575)

매출채권 등 대손사유(법령 §19의2①)	대손시기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상법 5년 → 민법단기소멸시효 3년 적용 어음 1년, 수표 6개월)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신고조정 가능) 세무조정에 손금산입
5.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6.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저당권 설정의 경우 제외)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 손익계산서 반영

<p>8.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제외)</p> <p>9.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합계액 기준)</p> <p>10.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조정 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p> <p>11. 금융기관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과 대 손처리 요구를 받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p> <p>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p>	<p>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 손익계산서 반영</p>
--	---

## 위장전입, 중도실용의 인사관행(?)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양두구육(羊頭狗肉). 양머리에 개고기. 겉과 속이 다른 속임수를 꼬집는 말이다. 제(齊)나라 영공(靈公)은 괴상한 취미가 있었다. 예쁜 궁녀들에게 남장을 시켜놓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었다.

이 소문이 퍼졌다. 그러자 꺾 밖에서도 반반한 여자들은 임금의 눈에 띄까 해서 모두 남장을 했다. 나쁜 풍습이라고 절대 금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왕은 재상인 안영에게 까닭을 물었다. 안영이 답했다. "전하께서는 지금 꺾내의 여인들에게는 남장을 시키면서 꺾 밖 여인들의 남장은 금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밖에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은 속임수입니다."

왕은 깊이 뉘우쳤다. 꺾내 남장 미녀들에게 평상복을 하라고 명했다. 그러자 전국의 남장미녀들도 자진해서 여자 옷으로 갈아입었다.

언제부터인가 '위장전입'쯤은 그저 말로만 사과하면 되는 세상이 됐다. 이것이 중도실용·통합을 표방한 정부의 인사관행(?)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실로 유감이다. 정말 대다수 국민들은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자행치 못했을 것이다. 그 시대에 국민 모두가 그런 것처럼 두리뭇실하게 넘어가는 것은 후손에 대한 또 다른 범죄다.

불현듯 '파렴치범(破廉恥犯)'이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고 싶어졌다. 도덕에 어긋나는 동기로 생긴 범죄, 또는 그런 범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살인, 절도, 사기, 횡령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염치심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자가 범하는 범죄를 비(非)파렴치범이라고 한다.

예컨대 과실에 의한 범죄나 종교적·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범하는 확신행 등이 그것이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장전입'이 과연 파렴치범인지 비파렴치범인지는 잘 모르겠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양두구육' 말이다. 솔선수범해야 할 CEO들의 더티 플레이(dirty play)가 꽤 일어난다. 세련(?)된 대기업일수록 용의주도하게 입을 틀어막지만 세상구멍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

"모그룹의 전략기획실에서는 사문서 위조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략기획실은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는 그 그룹 간부출신의 고백도 있다. 전략기획실 최고위직 자녀의 유학을 위해 사규를 변경한 일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 남자가 자살했다한다. 사망자는 미국 최대소비자 금융기관 베네피셜의 상속자인 캐스퍼슨(67)이다. 그는 생전에 막대한 기부로 명성을 더했다. 그런데 그의 자살이유를 두고 명예롭지 못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그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탈세용의자였다는 것이다.

부유층의 세금회피는 오바마 대통령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힌 사항이다. ‘세계의 비밀 금고’인 스위스 UBS은행은 미국과 오랜 다툼 끝에 최근 미국인 고객명단을 미 국세청(IRS)에 건네줬다고 한다.

기부천사 양(羊)의 얼굴을 한 늑대라는 탈세범이 자본주의를 망치고 있다. 미국 월가 발 세계 경제위기의 원흉은 사실 무책임한 CEO와 금융조직의 모럴헤저드와 배금주의에 절은 대다수 미국인들의 광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던가.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12일 (금)	5월 15일 (월)	5월 16일 (화)	5월 17일 (수)	5월 18일 (목)
미	달 러 (USD)	1320.30	1333.60	1337.80	1336.00	1339.40
일	본 엔 (JPY)	981.85	982.21	983.57	979.29	973.44
영	국 파 운 드 (GBP)	1651.76	1660.07	1675.59	1667.46	1672.58
캐	나 다 달 러 (CAD)	978.62	983.59	993.47	991.21	994.99
홍	콩 달 러 (HKD)	168.48	170.05	170.67	170.44	171.03
중	국 원 (CNH)	190.44	191.86	192.01	191.72	191.29
유	로 화 (EUR)	1441.24	1447.09	1454.79	1451.16	1451.64
호	주 달 러 (AUD)	884.67	885.91	896.59	889.04	891.91
싱	가 폴 달 러 (SGD)	991.51	996.26	1001.12	996.61	997.84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5.87	297.75	297.45	297.12	296.00

## 퇴직급여 손금산입 관련

**Q**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당사 임원은 DC로 가입되어 있으며,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아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근속연수별 배수를 적용하여 금액이 꽤 높게 나옵니다.  
 매년 회사 사정에 따라 불입하다 보니 올해 연도말 기준 상당한 부족액이 예상됩니다.  
 질의) 불입 부족액을 올해 기준으로 모두 퇴직급여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A**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한도내의 금액을 dc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입액을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과 980, 2011.12.0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이혼한 친모 및 계모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문의

**Q**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이혼한 친모 및 계모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이혼한 친모 및 계모의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입증되는 사람,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도 부양가족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Q**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2022년 8월에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 했으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중간정산)을 지급 못함  
2023년 4월 회사에 자금사정이 나아져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려는 2023년 4월 현재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일 때(2022년 8월 주택 구입)

질의1) 이경우 2023년 4월 현재 시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질의2) 질의1)이 불가하다면 처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한 2022년 8월 시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항 1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A** 근로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추후 지급하려는 경우로 주택을 이미 소유한 상태에서도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차량 렌탈관련 회계처리

**Q** 업무용 차량(승용차) 렌탈시 렌탈기간이 4년이면 금융리스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운용리스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A**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렌탈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5년 중 4년이면 80%이므로 금융리스로 해도 됩니다. 통상 금융리스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귀사에게 이전되므로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처리를 하는데 귀사가 리스업체와 운용리스로 계약했는지 금융리스로 계약했는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K-IFRS에서는 금융리스만 허용)



# 금융소득은 비교과세 방법에 의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합산과세는 필요 없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이들 소득 중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사채이자,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① 이자소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상기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② 배당소득

-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은 제외)수익의 분배금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 ① 거주자

개인(자연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납세의무자이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 ②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방법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데,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의 소득세가 원천징수시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비교과세방법

① (2천만원×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여타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

② (금융소득×14%\*) + (여타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

\*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세율(예 : 비영업대금 이자는 25%)

①·② 중 큰금액으로 산출세액 계산함.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3.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이 함께 있는 경우
5.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6.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국가별 반도체 세제 및 보조금 혜택 요약표

경쟁국	시설투자 세제혜택	연구개발 투자 세제혜택	보조금, 재정 등
미국	25% 세액공제	R&D 개발자금 14조원 지원(110억달러)	69조원(527억 달러)
중국	첨단공정 10년간 법인세 완전면제	국가 반도체펀드 총 62조원 투자(3천4백억 위안)	180조원(1조 위안)
일본	-	미일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설립 3조 4천억원(3천5백억엔)	19조원(1조 9천억엔)
유럽	-	범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 14조원(110억 유로 투입)	59조원(430억 유로)
대만	5% 세액공제	25% 세액공제	4조
한국	8% 세액공제(중소 16%) * 15% 세액공제(중소 25%) 상향 추진 중	30% 세액공제(중소 40%)	1,000억 ('23년 인프라 지원)



## 일자리 창출 조세감면 내용

단계	주요 내용
신규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li> <li>*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3백만원(최대 3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 (조특법 §30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100%</li> <li>*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 75%, 그 외 5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 70%(청년 5년간 9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1,550만원(최대 3년)</li> <li>-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전환인원 1인당 900만원~1,300만원</li> <li>- 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 복귀자 1인당 900만원~1,300만원</li> <li>*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가능(중복불가)</li> </ul> </li> </ul>
재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휴직복귀자 복직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간 인건비 30%(중견 15%)</li> </ul> </li> </ul>
고용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조특법 §30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임금감소 총액×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li> </ul> </li> </ul>
임금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 10%, 중소 20%) 공제</li> </ul> </li> </ul>



## 직장인영어회화 공부법 6

### 일반적인 상황에 대비하라

#### 1) 격식 있는 이메일

일반적으로 이메일 작성은 동료(또는 클라이언트)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더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직장 이메일은 일반적으로 형식적이므로 형식과 단어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 2) 자기소개

필요할 때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개는 장황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웃고, 친근하게 대하고,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세요.

#### 3) 도움 요청

이것은 비영어민에게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작업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보여주어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 4) 도움 제공

필요할 때 동료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에 대한 답례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쉽습니다. 동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 5) 그룹 회의

그룹 회의는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제시합니다. 때때로 회의는 엄격한 의제를 따르지만,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순간이 왔을 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6) 전화 통화

전화 통화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전화 통화는 매우 간단하지만 다른 통화는 길고 복잡하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전화로 말할 때마다 항상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최 신 판 례 예 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취득자에게  
주가하락차액 부담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017, 2022.11.30

### 질 의

- 최대주주인 개인이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소속된 회사들과 무관하게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법규재산-172, 2022.04.13

### 질 의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년 중 1주택을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02.1.1. 이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서면법규재산-154, 2022.12.13

### 질 의

-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01.12.31. 이전에 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

02.1.1. 이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재편입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69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보유기간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군 소재 면지역에 있는 토지가 '01.12.31.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02.1.1. 이후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어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입니다.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전법규부가-1399, 2022.11.29

### ■ 질 의

- 질의법인이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 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1. 질의법인이 수수료(이용료와 제휴대가 차액)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1에서 용역 공급이 아닌 경우] 질의법인과 제휴사, 질의법인과 이용자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제휴사가 받는 제휴대가의 물품 용역 공급가액 포함 여부

3. [질의2에서 질의법인과 제휴사, 질의법인과 이용자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질의법인이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회 신

1. 귀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제과-507(2022.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

1. 사업자가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 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자가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전월세 신고제 제도 1년 더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이달 말에서 1년 더 연장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로 연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내부에서 여러 안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는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켜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가 새 정부 출범 후 1년 더 연장했다. 내달부터 신고기간 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한번 더 미뤄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과태료와 상관없이 신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지금 전세가율, 역전세, 강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켜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해서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공사하면서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벌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거래처 믿을 만 하나?… 세금포인트로 신용조사 하세요

수출 중소기업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해외 거래처가 믿을 만한 곳인지 신용조사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가 6월 1일부로 개시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액 10만원 당 1점씩 부여하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이날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에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15→20일 확대… 포괄 자료요구 원칙적 금지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 및 현장조사 제한 등 세무조사 절차를 대거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6일 납세자 부담 완화, 적법절차, 적법과세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대상은 법인은 연매출 500억 미만, 100억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더라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현장조사의 경우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가급적 전체 세무조사 기간의 절반 이하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라도 7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전국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 국세청, 2023. 5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 ①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 ②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⑤)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③).
  - \* 월세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 \* '18년 과세연도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구 분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적용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과 세	대 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비과세	배 제

●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⑬)



-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  $\text{Max } ① \text{ 산출세액} \times (\text{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금액}) \times 5\%$     ②  $\text{사업소득 총수입금액} \times 0.02\%$
    -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text{Max}(\text{무신고가산세}, \text{무기장가산세}) + \text{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 §81의6③)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음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 종 별	'14-'17귀속	'18귀속부터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 서비스업1)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분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22년 귀속)

###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sup>1)</sup>, 고정자산매각액<sup>2)</sup>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함

$$\text{주업종}^{1)}\text{의 수입금액} + \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times \frac{\text{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2)}}{\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1)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2)기준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소득세과-729, 2019.5.23.)

### 3. 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함
  - \*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 5.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6.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7.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함
  - \* Max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 8.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 9.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17년 귀속까지는 100만원)로 공제하는 것임

#### 10.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 '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함

## 11.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1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조특법 제126조의6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 조특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

###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제조업 15억 (2022.5.1. 신규사업자)	대상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이상 *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② 부동산임대업 4억 (전년도 제조 50억인 경우)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③ 음식업(6.30. 폐업) (7억) 도매업(10.1. 개업) (5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 7.5억) 이상 * 음식 7억+음식환산 2.5억(5억×7.5/15)
④ 제조업 7억 (7.1.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 할 때까지의 수입금액임)	대상 아님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 폐업, 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⑤ 도매업 13억, 제조업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 15억) 이상 * 도매 13억+도매환산 2억(1억×15/7.5)
⑥ 음식점 7억, 부동산임대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 7.5억) 이상 * 음식 7억+음식환산 1.5억(1억×7.5/5)
⑦ A사업장(제조 3억, 도매 2억) B사업장(제조 2.5억, 도매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제조 7.5억) 이상 * 제조 5.5억+제조환산 2억(4억×7.5/15)
⑧ A사업장(도매 10억) B사업장(부동산임대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 15억) 이상 * 도매 10억+도매환산 6억(2억×15/5)]



## ■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억 [손익분배비율 50%]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서비스 5억) 이상 * 공동사업장별(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 합산)로 판단, 손익분배비율과 무관
②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억 [손익분배비율 80%], 단독사업장 제조업 7억	대상 아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단독사업은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③ 공동사업장A 부동산임대업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단독사업장B 부동산임대업 2억 단독사업장C 소매업 1.5억	공동 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이상 단독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2.5억 * 임대 2억+ 임대환산 0.5억(1.5억×5/15)
④ 공동사업장A 제조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병]	A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장A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이상 공동사업장B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미만 *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⑤ 공동사업장A 제조 10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을]	A, B 사업장 모두 대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 이상 *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1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판단

## ✓ 관련 최신 예규

### 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2. 소득, 소득세과-1662, 2016.11.04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3.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함

### 4. 소득, 소득세과-1596,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건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5. 소득, 법령해석과-1083, 2016.04.01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세법개정으로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18귀속부터)

### 6. 서면소득 2015-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7. 사전법령해석소득 2015-107, 2015.06.30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8. 서면소득 2015-176, 2015.05.12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 9. 소득, 서면법규과-611, 2013.05.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0. 법규소득2013-214, 2013.07.01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1. 징세과-1037, 2012.09.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2. 소득세과-463, 2012.06.0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8년 귀속부터는 120만원

#### 13. 소득세과-461,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14. 소득세과-364, 2012.04.30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5. 소득세과-348, 2012.04.25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16. 소득세과-335, 2012.04.21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7. 소득세과-182, 2012.03.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 2023. 5

## -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1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소득

#### 1)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2) 종교인소득 이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

-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교인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2 신고기간

구분	과세 기간	신고 기간
일반적인 경우	1.1. ~ 12.31.	다음연도 5.1. ~ 5.31.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1.1. ~ 사망(출국)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다음연도 1.1. ~ 5.31. 중 사망(출국)시	1.1. ~ 12.31. 다음연도 1.1. ~ 사망(출국)일	(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 3 납세지

- 소득세에서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함

구분	납세지
종교인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li> <li>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li> </ul>

## 4 신고서 작성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는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려는 경우 또는, 종교인소득 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인소득 외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 20.1.1. 이후 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서식으로 신고

## 5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				
소득 공제	인적	기본(본인·부양가족·배우자 1인당 150만원)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	○
	특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건강·고용보험료(전액)	×	○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	○
	조 특 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펀드 저축액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과세표준				
(×) 세율(6~45%)				
산출세액				
세 액 공 제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	○
	연금계좌(12%,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한도), 50세 이상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



한도))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추가납입 허용			
특별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	○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만원) 한도)	×	○
	기부금(종류·금액별 20%, 35%)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세액공제 미신청자)		○ (7만원)	○ (13만원)
조특법	정치자금기부금 등(100/110, 15%, 25%)	○	○
결정세액			

## 6

## 종합소득세 세율

- 종교인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2022년 귀속

과 세 표 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참고) 간편법

과 세 표 준	산 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2% - 3,540만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금액의 45% - 6,540만원

- 2023년 귀속

과 세 표 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참고) 간편법

과 세 표 준	산 식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5% -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24% -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5% -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8% -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0% -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금액의 45% - 6,594만원

## 7 신고서 제출방법

-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 ①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 선택
  - ②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선택

## 8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예상세액 비교기능 제공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 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상세액 비교기능 제공



\* 홈택스(www.hometax.go.kr) → 화면 중간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세금모의계산」→

## 9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 1) 납부

- 종교인은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기재하여 5월 1일~ 31일 중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납부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

### 2)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중 체납된 국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한 후의 잔여금을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이 신고서에 표기한 은행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환급통지서를 송부함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서상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경우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 무신고·과소신고시 불이익 등

### 1.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시 불이익

- 종교인 소득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한 경우 4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경과일수×2.2/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납부

세액의 10%(부정한 경우 4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경과일수 × 2.2/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2.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

### 1) 수정신고

- 당초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2) 경정청구

- 당초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거나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3) 기한후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 2023. 5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
    - (기존) ①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추가신설) ③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 2023. 5

◆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개요) 상장회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중과실)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18.11월 시행)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 ◆ 과징금 부과현황

① (부과 과징금) 최근 5년간('19.1월~'23.3월) 회계감리 결과, 92사에 대해 총 666.5억원 \*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62.2억원(69.3%),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204.3억원(30.7%)

\*\* 부과총액(억원) : ('19년) 51.6 → ('20년) 93.6 → ('21년) 193.4 → ('22년) 290.3

② (외감법상 과징금) 같은 기간 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3억원이며, 부과액\*과 부과건수\*\*가 점차 증가

\* ('19년) 사례 없음 → ('20년) 19.7억원 → ('21년) 33.2억원 → ('22년) 123.5억원

\*\* 회사/임직원/감사인 : ('20년) 1건/2건/0건 → ('21년) 1건/6건/1건 → ('22년) 10건/14건/8건

○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2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61.9%), 회사관계자 55.4억원(27.1%), 감사인 22.4억원(11.0%) 순

◆ (시사점) ❶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과징금 부과 가능해져 조치대상 확대, ❷감사, 임직원 등 회계부정 연루자에 대해서도 금전제재가 가능해져 제재 실효성 강화 및 회계기준 준수意識 제고, ❸감사보수를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유인



## I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제도 개요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금전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부과
- (외부감사법)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한 회사·감사인에게 부과
  - (부과대상)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위법행위 관련자
  - (부과금액)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
  - (부과기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과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비교>

구 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감법상 과징금
회사	대상법인·서류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정기보고서 등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재무제표
	한도	· (증권신고서) Min(모집·매출가액의 3%, 20억원) · (정기보고서) Min(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20억원)	·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0%  ※ 법상한도 없음
회사관계자	대상자	· 회사의 대표이사 등(증권신고서에 한함)	·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담당자, 업무집행지시자 등
	한도	· 50백만원(최대주주) · 20백만원(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Min(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	대상 보고서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증권신고서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감사보고서
	한도	· 감사보수의 2배	· 감사보수의 5배

## II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부과현황

### 1 전체 과징금(외부감사법 + 자본시장법) 부과현황

- (개황) 최근 5년간('19.1월~'23.3월) 회계조사감리 결과, 총 92사에 대하여 총 66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2억원으로 비중이 크고(69.3%),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3억원으로 30.7% 수준
  -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
    - \* 외감법상 과징금(총액) : ('19년) 없음 → ('20년) 19.7억원 → ('21년) 33.2억원 → ('22년) 123.5억원
    - \*\* 최대부과금액 : ('19년) 14.3억원 → ('20년) 21.4억원 → ('21년) 83.1억원 → ('22년) 75.0억원
  -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로 감리건당 평균 부과액\*도 증가
    - \* ('19년) 2.1억원 → ('20년) 5.5억원 → ('21년) 9.7억원 → ('22년) 15.3억원

#### <과징금 부과현황 ('19.1월~'23.3월)>

(단위 : 억원, 건)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1Q	누계
부과 총액	51.6	93.6	193.4	290.3	37.6	666.5
부과대상 감리건수	25	17	20	19	11	92
평균 부과액	2.1	5.5	9.7	15.3	3.4	7.2

- (부과대상별) '19년~'23.3월 기간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8억원으로 대부분(85.2%)을 차지하며, 회사관계자 58.5억원(8.8%), 감사인 40.1억원(6.0%) 順으로 부과
  - (회사) 부과 과징금(567.8억원) 중 외감법상 과징금(126.5억원)이 22.3%\*
    - \* 법 체계상 부과 과징금 총액 중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부과대상 확대, 중대 회계사건 처리 및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과 부과건수 증가 추세
  - (회사관계자) 전체 과징금(58.5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55.4억원)이 대부분(94.7%)으로 부과총액과 대상자 모두 증가 추세
    - 대표이사 또는 회계담당 임원 외에도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확대되어 감리건당 부과 대상자\*도 증가



- \* ('19년) 1.0명 → ('20년) 1.4명 → ('21년) 1.7명 → ('22년) 2.1명
- (감사인) 부과과징금(40.1억원) 중 외감법상 과징금(22.4억원)이 55.8%를 차지하며, 부과총액과 조치대상 감사인 증가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에게 전체 부과 과징금의 77.6%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 2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 (개요) 신외감법 시행 이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총 204.3억원이 회사, 회사관계자 및 감사인 등에 부과
- '18.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부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조치가 가능해져 '20.7월 최초 부과 이후 연도별 부과총액\*은 증가추세이고, 최근 '23.1분기는 27.9억원으로 나타남
- \* ('20년) 19.7억원 → ('21년) 33.2억원 → ('22년) 123.5억원 → ('23.1Q) 27.9억원

###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20.1월~'23.3월)>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년	'21년	'22년	'23.1Q	누계
부과총액	19.7	33.2	123.5	27.9	204.3
부과대상 감리건수	2	6	15	9	32
평균부과액	9.8	5.5	8.2	3.1	6.4

- 회사 과징금이 126.5억원(61.9%)으로 가장 많고, 회사관계자 55.4억원(27.1%), 감사인 22.4억원(11.0%) 순
- (회사) 부과금액 중 외감법상 과징금액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
- \* ('21년) 6.9% → ('22년) 33.7% → ('23.1Q) 66.8%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에 4건(18.2억원)을 부과하는 등 조치대상 회사 확대

### < 회사에 대한 부과 사례 >

-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가 '18~'19회계연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고수 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사업보고서에 공시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5.8억원을 부과하고, 외감법상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초과함에 따라 그 차액인 21.7억원을 추가로 부과

- (회사관계자) 대표이사(27.7억원, 50.0%)와 담당임원(15.5억원, 28.0%) 뿐만 아니라, 회계 부정에 연루된 감사, 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등(12.2억원, 22.0%) 조치대상자가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 전원으로 대폭 확대

#### < 회사관계자에 대한 부과 사례 >

- (업무집행지시자) 코스닥 상장회사인 B사의 부회장 갑(甲)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매출 과대계상 등의 회계처리 위반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집행지시자로 판단하여 동인에게 외감법상 과징금 6.9억원 부과

□ (감사인) '21년 최초 부과 이후 부과금액과 부과건수 증가 추세

-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금액(22.4억원)은 조치대상 연도 감사보수(17.8억원)의 약 1.3배로 실효성 있는 금전제재 수단이 된 것으로 평가

#### < 감사인에 대한 부과 사례 >

- 회계법인은 회사가 매출,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하였음에도 중요 거래처에 대한 매출구조 파악 및 거래조건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감사보수의 150%(1.35억원)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효과 및 시사점

①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전제재 대상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서 비상장회사도 포함되어 부과대상과 부과금액 대폭 증가

⇒ 위반정도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로 회계 부정 또는 중대오류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투자(예, 감사품질 우수 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 등) 촉진

②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대상이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로 확대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관계자가 대폭 증가하고,

- 회사는 과징금을 대체하여 증권발행제한 조치하더라도,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신분제재와 과징금을 병과하여 제재 실효성 강화

⇒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에 대한 금전제재 확대로 회계처리기준 준수인식 제고 및 회계부정 지시를 받은 기타 이해관계자(예, 최대주주 등 사주가 아닌 CEO·CFO, 회계실무자)의 부정행위 신고 증가 예상

③ (감사인) 대부분의 부과금액이 감사보수를 상회하고 있어 과징금 제도가 감사절차 소홀에 따른 실효성 있는 금전제재로 안착

⇒ 감사실패에 상응하는 금전제재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 유인 및 특히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



## 붙임 1 -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 제도

- ☐ 증선위는 상장법인 등이 각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 또는 기재누락하여 공시한 경우,
-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후 감면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 부과
  - ※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법(§ 430)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 기간, 회수 등을 고려

### <신고자(공시위반법인)에 대한 과징금>

구분	기준금액	최고 부과비율	법정한도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모집 또는 매출가액	3/100	20억원	§429①
정기보고서	직전 연도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10/100	20억원	§429③

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중요사항보고서 부과비율을 규정

- ☐ 신고자(회사) 외의 자(대표이사, 외부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은 증권신고서(자본시장법 § 429①)상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 위반행위시에만 부과
- \* 외부감사인의 경우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적정인견을 표명한 경우
-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13.5.28. 자본시장법 개정('13.8.29.시행)으로 제척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년의 제척기간 적용

## 붙임 2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제도

- ☐ 외부감사법(§ 35, § 36)에 따라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부과
- (회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회사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회사관계자\*)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 (감사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로 받은 보수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금 부과 가능

- (고려사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회사의 상장 여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함
- (부과방식)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 부과

□ 과징금 부과액 산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외감규정 별표8)

과징금 부과액	=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	+	가중	-	감면
---------	---	------	---	-------	---	----	---	----

\* 기본과징금: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회사의 경우 2~20%)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8년(감리시 시효 중단)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

- 금융감독원 2023. 5

## 1 배 경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규정 § 6④\*, '23.5.2. 시행)으로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이하 '평가·보고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상장회사협의회)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 기업 경영자(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동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현 상장회사협의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체계>

구 분	설계 및 운영 관련	평가 및 보고 관련
원칙적 적용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자율적 지침	설계·운영 적용기법(일반, 중소기업) 설계·운영 적용사례	평가·보고 적용기법(일반, 중소기업)

## 2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방대한 현 자율규정\*의 필수적 사항 선별 및 명료화, 준거기준으로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하였습니다.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 : 111문단, ② 적용기법(대기업) : 165문단, ③ 적용기법(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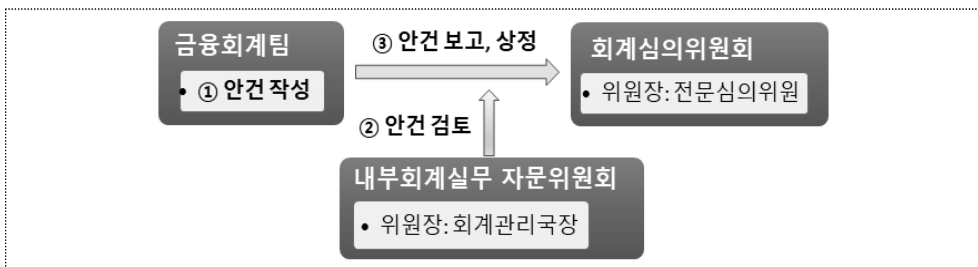
기업) : 165문단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1명), 유관기관(2명), 학계(2명), 회계업계(3명), 기업측(3명) 등 11명으로 구성했으며,
- ① 평가보고지침 제·개정시 자문, ② 실무 적용이슈 자문, ③ 동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평가보고지침은 자문위 검토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개정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정관 규정에 따라 회계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심의기구(총 7명)

#### <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제·개정 절차 >



### 3 자문위 첫 회의 결과

- 5.12일(금) 자문위 첫 회의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지침 제·개정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 그간 상장법인이 현 자율규정(상장협)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대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현 준거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 법규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지침에 반영하고, 핵심적인 절차는 서술 방식을 가능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예정입니다.

### 4 향후 일정

- 5.12일 자문위 첫 회의(Kick-off)에서 제·개정 방향 논의를 시작으로 2~3차례 논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에 평가보고지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필수적 평가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잦은 질문사항(FAQ)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 &lt;향후 일정&gt;

일 정	내 용
5월12일(1차 자문위)	· 자문위 운영방안 및 평가·보고지침 제정 방향 논의
6~7월(2·3차)	· 평가·보고지침 초안 마련 및 자문위 논의
8월(4차 자문위)	· 평가·보고지침(안) 마련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9월	· 외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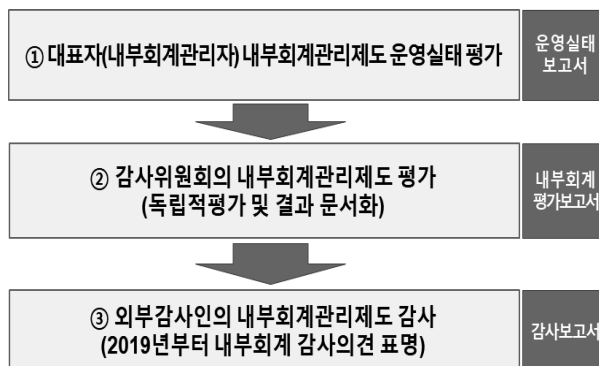
※ 세부 일정은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1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법인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함
  - ※ 외부감사법에서는 '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외부감사인인 '검토'를 통해 외부 검증을 받도록 하였고, '18년 新외감법 시행에 따라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장법인의 인증 수준을 '감사'로 강화하는 등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 중
- (운영 및 평가)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
- ①경영자의 운영실태 평가, ② (내부) 감사(위원회)의 평가, ③외부감사인인 인증(감사 또는 검토)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검증
  - '19년부터 상장법인의 내부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수준이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 \* (개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19년) → 5천억원 이상('20년) → 1천억원 이상('22년)

## &lt;참고&gt;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체계

- ① 대표자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설계·운영·평가·보고)
- ②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③ 외부감사인인 감사(검토)의 견 표명
- ➔ 3단계로 진행



## 붙임 2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주요 내용

- ① (적용대상) 상장법인 및 전년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단, 공적법인 등\*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함(법 §8①, 시행령 §4, §9①)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소속회사, 금융회사

\*\* 단, 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종업원 6명 미만 회사 등 적용 예외

-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운영범위는 개별(별도) 회사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 재무정보로 '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령 §9②6.)

\* 자산 2조원 이상('23년) → 5천억원 이상('24년) → 전체('25년)

- 비상장법인의 운영범위는 개별(별도) 회사 재무정보로 한정

### (참고)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8①, 시행령 §9②)

-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법)
-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법)
-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법)
-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법)
-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법)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영)
-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영)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영)
- 회사 대표자의 운영실태보고의 기준 및 절차(영)
-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영)
-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영)

- ② (운영 및 평가보고 체계)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 (대표자) 내부회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법 §8③,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시행령 §9④, 규정§6③1.)**

## ◆ 보고서 포함 내용(시행령 §9④)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등

## ◆ 보고서 작성 기준 및 절차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규정§6③1.)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정할 것
- 회사의 대표자는 상기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영 제29조에 따른 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영 제9조제4항제1호의 계획에 반영할 것

- (감사(위원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내부회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법 §8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시행령 §9⑤, 규정§6③2.)**

## ◆ 보고서 포함 내용(시행령 §9⑤)

-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 ◆ 보고서 작성 기준 및 절차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규정§6③2.)

- 회사의 경영진 및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 붙임 3 -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구성내용

#### 1. 평가보고 모범기준

내 용	문단
제1장 개요	1~17
목적 및 적용	1~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의의	7~10
평가·보고의 원칙	11~1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1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의 분류	16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의 고려	17
제2장 평가 절차	18~7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개요	18~21
재무보고 위험과 통제에 대한 식별	22~46
- 재무보고 위험의 식별	24~29
- 재무보고 위험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통제의 식별	30~36
- 전사적 수준 통제의 고려	37~41
-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역할	42~43
- 평가의 근거자료	44~46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47~71
- 평가 시 필요한 증거자료 결정	52~58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 수립	59~67
-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증거자료	68~71
복수의 사업단위에 대한 고려	72~74
제3장 보고 시 고려사항	75~101
통제 미비점에 대한 평가	75~86
경영진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결론	8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보고	88~9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93~97
재무제표 재작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미치는 영향	98~9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특정 영역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	100~101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102~111
제5장 부칙	112~113



## 2. 평가·보고 적용기법(대기업 및 중소기업)

내 용	문 단
목적 및 적용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2~2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개요	3~25
하향식 접근방법 또는 위험기반의 접근방법(Top-Down/Risk-Based Approach)의 적용	3~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대상	5~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절차	7~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시기	10~16
평가자	17~1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통제구성요소별 평가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방식	23~25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려	26~30
개요	26~27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성격	28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일반적 예시	29
전사적 수준의 통제활동 평가 결과의 활용	30
정보기술 일반통제(IT General Controls)	31~37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평가	31~37
프로그램 개발(Program Development)	34
프로그램 변경(Program Changes)	35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보안(Access to Program and Data)	36
컴퓨터 운영(Computer Operation)	37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식정보의 파악	38~45
위험평가를 통한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식정보의 파악	38~39
양적 요소	40~41
질적 요소	42~44
위험평가 결과에 기반한 유의한 계정과목 등 선정	45
경영자 주장의 식별	46
유의한 업무프로세스의 파악 및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47~61
유의한 업무프로세스의 파악	47~50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51~55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외부서비스제공자의 이용	56~6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62~87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62~77

내 용	문단
프로세스	63
통제목표 또는 통제위험	64~65
통제활동	66
관련 계정과목 및 경영자 주장	67
통제의 속성	68
통제유형: 예방통제와 적발통제(Preventive/Detective)	69~70
통제유형: 자동통제와 수동통제(Automated/Manual)	71
수행빈도	72~73
통제운영자의 적격성 요건	74
관련된 정책 및 절차	75
출발점(Baseline)	76
통제운영책임자(Control Owner)	77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	78~79
거래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	80~87
통제기술서	81~82
업무흐름도	83~84
업무기술서	85~86
업무분장표	87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개요	88~93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88
핵심통제(Key Control)의 결정	89
통제활동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 및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방 안 결정	90~93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94~10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94
설계의 효과성 평가 방법	95~100
설계의 효과성 평가의 문서화	101~10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103~12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103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행	104~12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행	104~105
테스트 방법	106~109
테스트 범위10	110~111
테스트 수행 시기	112~12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의 문서화	122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시 발견된 예외사항 평가	123~128





내 용		문 단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에서 발견된 예외사항의 평가 절차	123~125
	평가기준일 이전에 통제상 미비점 수정	126~128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		129~149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129~131
	미비점의 분류	132~133
	미비점 분류를 위한 고려항목	134~145
	발생가능성	134~135
	금액적 크기	136~137
	보완통제의 고려	138~139
	회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객관적인 관리자의 판단	140
	재무보고 감독 기구의 판단	141~142
	미비점의 타미비점과의 종합적인 고려(Aggregation of Deficiencies)	143~14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평가 절차		146~14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결론: 대표자		150~15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결론: 대표자	150~151
	대표자의 효과성 평가 결론 표현 방법	152~153
	대표자의 효과성 평가 결론 도출	154~156
	대표자의 운영실태보고서	15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결론: 감사(위원회)		158~16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보고: 감사(위원회)	158
	감사(위원회) 평가 절차	159~161
	감사(위원회)의 효과성 평가 결론	162~164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165
<별첨>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		